

‘장미대선’ 선거일 5월9일 임시공휴일

4월11~15일 선거인 명부작성 · 15~16일 후보자 등록 · 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 · 5월4~5일 사전투표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5월9일을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최종 확정했다. 또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직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권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이 권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날이자 권위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9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행정부의 대통령 선거일 공고지후 서울청사 5층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5·9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4월11~15일 선거인 명부작성에 이어 4월15~16일 후보자 등록 신청, 4월 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 5월4~5일 사전투표 등 선거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장관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권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면서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뉴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요구가 나온지 6시간 만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박, 21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 받을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오전 9시40분께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준비사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21일로 정했다”며 “구체적인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일자를 공개통보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요구가 나온지 6시간 만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된 뒤 5일만에 나온 공개소환 통보에는 더 버티지 못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가지 전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서면질서 발송, 공개소환 및 포터라인 설정 여부 등을 놓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 “이달 말까지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과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고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며 “최소 시간이 40일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대선주자들, 개헌합의 ‘반발’

문재인,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했다”

심상정 “대선포기 정당 뺏다리걸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민심과 따로 노는

것이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 추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인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느냐.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 국민들의 의견은 물어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른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정치권은 뭐하고 있느냐”며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특위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며 “개헌특위 자체의 논의를 넘어서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 아니냐. 급박하게 대선 전에 개헌을 끝내겠다는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게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게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황 대행 대선 출마는 적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도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3당의 오늘 합의는 대선포기 정당들의 정략적 뺏다리걸기”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야당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어 “헌법은 국민 삶의 틀을 짓는 최고 규범이다. 충분한 공론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때에 쓸 수는 없다”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일정에 개헌일정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되도록 많은 일로 민심만 어지럽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적 반감만 키워, 필성부른 개헌나무의 싹만 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유성엽 의원, 정읍·고창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은 지난 14일 지역 일자리 및 생활체육 관련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정읍 시니어공공작업장 사업 3억원, 정읍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3억원,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관광개발 5억원 등이다.

유성엽 의원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인 만큼 정읍, 고창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인재용 기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관광공사, JEONJU, 한국관광공사, 전주관광공사, 유네스코 음식철학도시,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철학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